



제21대 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나비가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린 국회 본관 건물을 배경으로 날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일하는 국회' 약속 했다더니...

상임위長 자리 신경전 원구성 협상 지지부진

21대 국회 임기 시작

법사위·예결위 두고 여야 견제
첫 임시국회 일정 차질 생길 듯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4년간의 임정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21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산더미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린 오명도 극복해야 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야의 약속과 달리 '일하는 국회'는 출발조차 못 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 중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 '알짜'로 꼽힌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향하는 모든 법안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기능을 한다. 예결위 역시 정부 예산이 처리되기 위해 넘어야 할 필수 관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 과제 수행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17대 국회 이후 줄곧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

서다. 예결위원장 역시 같은 논리다. 이와 관련해 주요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 여당도 180석을 갖고 있어서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맡아도 여당이 국회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따른 첫 임시국회(개원 국회) 일정은 지켜지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 첫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1대 개원 국회는 6월 5일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정 시한 내 국회 개원' 역시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과제로 ▲제3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포함한 K 방역 관련 법안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등을 내세웠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고용부, 특수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접수

고용노동부는 6월1일~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올해 3~5월 소득·매출 감소에 대한 지원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치다. 신청자는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2019년12월~2020년1월 중 10일 이상 일했거나 소득(50만원 이상)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020년 3~4월 평균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코로나19 여파... 지방공항 줄줄이 휴업

인천·김포 등 국내 15개 공항 운영
그중 군산·원주 5곳 항공기 미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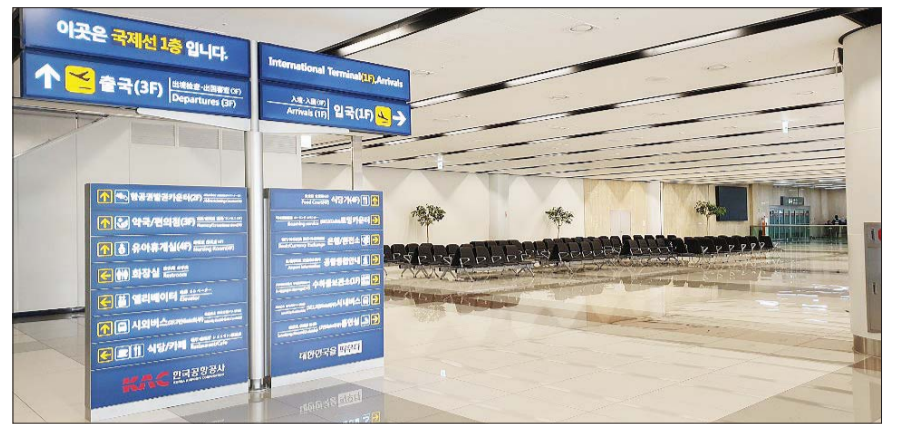
정부, 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적자 공항 10곳 적자폭 확대 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줄자 개점휴업을 하는 지방공항이 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5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 1월 이후 국내 공항들의 상황은 점차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기의 운항이 줄며 공항의 활용도도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국제공항과 함께 울산, 광주,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등 지역에서 총 15개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된 비행기는 총 329편(출발·도착 총합)으로 전년 동기 1109편이었던 사실 대비 약 70%가량이 줄었다. 또한 일부 지방공항의 경우에는 최근 아예 운항하는 항공기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 중 ▲군산 ▲원주 ▲포항 ▲사천 ▲무안 등 5곳은 현재 항공기가 뜨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항공사들이 이익이 적게 나는 지방 노선을 우선적으로 중단시키며 빚어진 일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항공공사 관계자는 "일부 지방공항은 지금 항공사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도, 공항 내 시



김포국제공항 내 국제선 청사 모습.

/김수지 기자

설 운영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시설은 그대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국제선의 도착지가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된 것도 지방공항의 '개점휴업'을 부추긴 한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국제선 인천 집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선 인천 집중 계획이란 제주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등 모든 국제선의 도착지를 인천국제공항으로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정부가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감면 및 납부유예 시켜주기로 결정하며 지방공항의 적자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기존 5월에서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착륙료는 10~20% 감면하고 공항시설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는 전액 납부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광주, 울산, 청주 등 이미

적자 상태였던 공항 10곳의 적자 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김포 872억 ▲김해 1180억원 ▲제주 721억원 ▲대구 120억원 등은 영업 이익을 냈다.

반면 ▲광주 -77억원 ▲울산 -1617억원 ▲청주 -99억원 ▲양양 -168억원 ▲여수 -185억원 ▲사천 -77억원 ▲포항 -155억원 ▲군산 -46억원 ▲원주 -47억원 ▲무안 -154억원 등은 영업손실을 면치 못했다.

허의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공항이 김포공항까지 해서 14개다. 김포, 김해, 제주공항은 원래 수용력이 부족할 정도였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머지 11개 공항 중에서도 무안과 양양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손님이 거의 없었다"며 "공항은 고객이 항공사인데 항공사가 어려우니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지방공항 활성화가 늘 과제였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많은 공항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박경미 교육비서관, 탁현민 의전비서관,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김재준 춘추관장, 이기현 시민참여비서관,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

교육비서관에 박경미, 의전비서관에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급 7명 인사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 교체한 비서관급 인사는 모두 7명이다. 먼저 교육비서관에는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의전비서관은 탁현민(47)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임명한다. 탁 전 자문위원은 현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인사에서 내부 승진한 케이스도 있다. 먼저 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 춘추관장이, 시민참여비서관은 이기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 청와대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해외언론비서관에는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이 발

탁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경미 신임 교육비서관에 대해 "홍익대 교수 시절 민주당 비례대표(후보) 1번으로 (20대 국회에) 영입돼 4년간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온 교육전문가"라며 "풍부한 교육 현장,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맞고 있는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신임 교육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언택트(비대면) 산업 육성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인데,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K-에듀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지수 신임 해외언론

비서관에 대해 "신임 이 비서관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신으로 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외신대변인을 지냈다. 국제 네트워크와 해외 소통 능력을 겸비해 외신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인사에서 내부 승진 사례가 4건인 점에 대해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신임 비서관이 20대 국회 임기를 마친 직후 청와대로 온 점에 대해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전직 의원이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비서관으로 올 때 전직 의원 신분이었다"며 "(20대 국회) 임기 끝난 직후 비서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정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선거를 마치고 재출정할 여유 없이 비서관으로 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최영훈 기자